

도시개발지역에서의 범죄양상과 효율적 대응방안

A Study on Crime Features and Efficient Countermeasure
in the Urban Development Area

도시개발지역에서의 범죄양상과 효율적 대응방안

A Study on Crime Features and Efficient Countermeasure
in the Urban Development Area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정웅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II. 범죄예방 제도화 모델

1. 범죄예방 제도화의 기본구상
2. 범죄대응 거버넌스

III. 도시개발 및 치안 현황

1. 도시개발 현황
2. 치안 현황

IV. 효율적 치안서비스 확보 방안

1. 치안서비스의 효율화 메트릭스
2. 치안서비스 확보 방안

V. 결 론

참고문헌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개발이 확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이들 지역이 다양한 범죄발생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내 치안수요 또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용인지역의 경우를 보면 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도시개발 및 인구유입이 가속화됨으로써 그에 수반하여 관내 치안수요 또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개발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자치경찰제 하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활성화에 대비하면서, 특히 용인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함축한 치안서비스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제도 정비 여하에 따라 상이한 치안성과(policing performance)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합리적 선택에 기반한 신제도주의 연구방법에 의해 효율적 치안서비스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신제도주의 하에서 논의되는 제도(institution)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도를 규칙(rule)과 같은 의미로 매우 한정적으로 파악하는 견해(Ostrom, 1986)보다는, “인간 상호관계의 틀을 형성하는 제약조건”으로 넓게 파악하는 견해(North, 1990)를 원용하고자 한다.¹⁾ 본 연구가 이처럼 넓은 의미의 제도 개념에

1) 역사적 안목 하에 제도 개념을 비교적 넓게 정의하고 있는 노스는 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인위적 제약을 제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도의 주요 범주로서 관습이나 행동양식과 같은 비공식적 제약(informal constraints), 법·규칙과 같은 공식적 제약(formal constraints)을 제시하고 있다 (North, 1990: 4).

서 출발하여 범죄예방 제도화 모델과 치안서비스 확보방안을 구상하려는 이유는 효율적 치안서비스 공급의 제도화가 경찰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유관기관, 민간 시큐리티 업체 및 주민 등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상호협조가 동반되는 하나의 동태적 과정으로서 그 범죄예방 협력상 문제들이 반드시 강제적 기속력을 갖는 공식적 제도차원만으로는 해결되어나갈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²⁾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II장에서 연구를 위한 분석 틀로서 범죄예방 제도화 모델을 구축하고 III장에서는 용인지역의 도시개발 및 치안 현황을 살펴본 뒤, IV장에서는 범죄예방 제도화 모델의 틀에서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PTED),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방범조직 활성화 등의 정책프로그램 도입과 그 제도화를 통한 생활안전 치안서비스의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 보고서의 기본 구상과 내용은 용인발전연구센터의 논문(정웅, 2007)에서 발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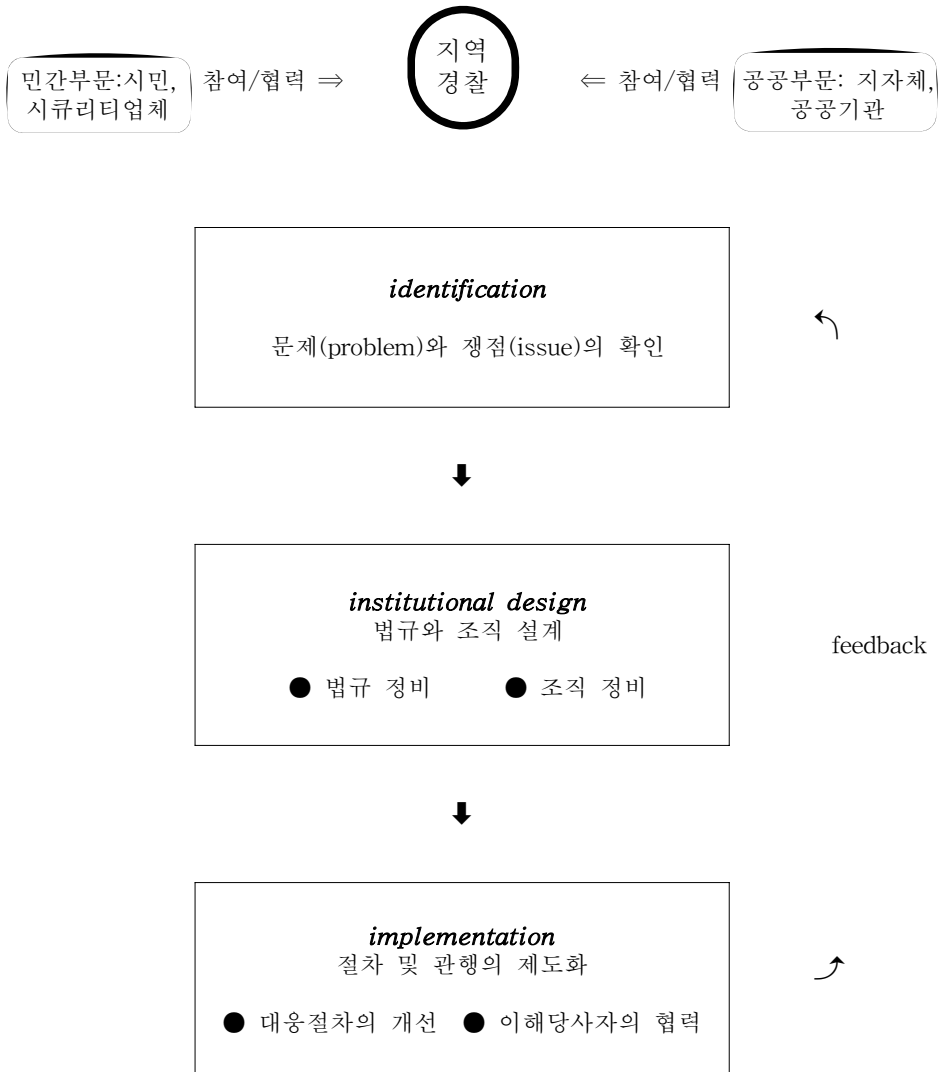
II. 범죄예방 제도화 모델

1. 범죄예방 제도화의 기본구상

본 연구는 서론에서 제도를 법, 규칙과 같은 공식적 제약(formal constraints) 및 비공식적 제약(informal constraints)을 포괄하여 정의하는 견해를 취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념에 기초할 때 범죄예방의 제도화란 “범죄예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식적인 법규와 조직, 구조화된 절차 및 관행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의에 따라 <그림 2-1>과 같은 범죄예방 제도화 모델을 구축해 볼 수 있다. 범죄예방의 제도화 과정은 절도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과 쟁점의 확인(identification), 법규와 조직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 설계(institutional design), 범죄예방을 위한 절차 및 관행을 제도화하는 집행(implementation), 그리고 환류(feedback)에 의한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범죄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주체는 지역경찰, 지자체·공공기관, 민간 시큐리티 업체·시민 등으로 볼 수 있다. 지역경찰은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행위자가 되며, 생활안전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이중에서 특히 심각한 쟁점으로 발전하는 것들은 공식적 법규 정비와 조직 개편, 범죄대응절차 개선 등을 통해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의 지역내 유관기관 역시 범죄예방의 주요 행위자이며 이해당사자인 바, 이들 유관기관도 범죄예방 제도화 노력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민간부문에서 시큐리티기업과 시민은 범죄예방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바, 생활안전 및 법제도상 문제점의 제기 등을 통해 범죄대응 제도화에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림 2-1> 범죄예방 제도화 모델



2. 범죄대응 거버넌스

위의 그림 <2-1>에서 나타난 범죄예방 제도화 모델에서는 지역경찰과 유관기관, 민간 시큐리티기업·시민 중 경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경찰,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세 영역의 행위자 모두 범죄대응에서 현실적 이해당사자이며 특히 지역내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민간 시큐리티기업·시민의 참여 협조는 범죄예방의 제도화에 가장 핵심적 성공요인이다.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조가 범죄예방의 제도화를 가능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입장은 범죄대응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거버넌스는 국가와 사회관계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형태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양자를 수평적인 파트너관계 또는 네트워크관계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상호의존성, 공통의 목적, 자원의 교환, 행위 주체들 간의 신뢰, 게임의 규칙,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간 자발적 네트워크”(Rhodes, 1997: 15) 혹은 “특정의 공유된 정책 목표가 있을 때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응집적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결정에 이르는 방식”(김석준 외, 2002: 7) 등으로 정의된다.

요컨대 거버넌스의 핵심을 구성하는 내용은 협력(collaboration), 동반자관계(partnership), 네트워크(network)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안전 확보와 범죄대책 등 공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범죄대응 거버넌스는 종래와 같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민간조직과 중간 매개적 조직들 간의 연결망에 의거한 협의적 결정과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대응 거버넌스는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적 및 사적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수용되면서 상호협력적 행동이 취해지는 과정이다. 이러한 범죄대응 거버넌스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민주화에 따라 지방화와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Ⅲ. 도시개발 및 치안 현황

1. 도시개발 현황

용인시의 도시개발은 1990년대 이후 진행된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심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용인시 관내에서 2006년 11월 현재까지 준공했거나 착수중인 택지개발사업은 모두 18개 지구이며 면적으로는 17,404천㎡, 수용인구는 32만 7,57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³⁾

이러한 용인시의 택지개발사업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지구지정 수로는 수원(21개 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고, 면적으로는 성남(29,817천㎡), 고양(29,283천㎡), 수원(25,952천㎡) 다음으로 4번째로 넓은 규모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수용인구 역시 고양(65만1,582명)과 성남(49만658명), 수원(44만6,207명)이 4번째 규모다.⁴⁾

용인시의 18개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2006년 11월 현재 12개 택지지구가 준공된 상태에 있다. 그중 1990년대에 구갈지구(1992. 1. 4), 수지지구(1994. 12. 20)를 필두로 김량지구(1998. 12. 31), 역북지구(1998. 12. 31) 등 4곳이 준공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택지개발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영덕지구(2000. 3. 31), 상갈지구(2000. 8. 30)를 시작으로 구갈2지구(2001. 2. 10), 수지2지구(2002. 12. 31), 동천지구(2003. 12. 30), 신봉지구(2004. 4. 30), 구갈3지구(2004. 12. 30), 신갈지구(2005. 12. 31) 등 8개 택지지구가 2000-2005년 말까지 준공됐다<표 3-1>.

이외에도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용인시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총 6개 지구로서 이 중에는 대규모 택지지구인 동백지구(2006. 12), 죽전지구(2006. 12), 흥덕지구(2008. 12)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3-2>.

용인시의 택지개발사업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뿐만 아니라 용인시, 경기지방공사 등 다양한 시행자가 참여하였다. 시행주체별로 보면 준공된 지구와 착수 중

3) 경기도 전체 면적의 5.8%를 점하고 있는 용인시의 면적은 592km²이며 이중 18개 택지개발사업 총면적 17,404천㎡는 용인시 면적의 2.9%에 해당한다.

4) 경기도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지원단(2006. 2. 1),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인 곳을 합해서 토지공사가 9개 지구를 개발하고 주택공사가 6개 지구, 용인시장이 2개 지구, 경기지방공사가 1개 지구를 개발했다.

<표 3-1> 용인시 택지개발사업 준공 현황

지구명	면적 (천㎡)	사업비 (억원)	세대수 (호)	수용인구 (인)	지구지정	개발계획	준공일	시행자
용인김량	60	218	882	3,352	93-11-08	95-01-17	98-12-31	용인시장
용인역북	59	272	809	3,074	93-11-08	95-04-04	98-12-31	용인시장
용인구갈3	958	3,263	4,553	14,130	96-04-24	99-07-20	04-12-30	경기지방 공사
용인영덕	115	n.a.	640	2,304	88-12-21	89-11-10	00-03-31	주택공사
용인상갈	330	n.a.	3,759	13,908	94-10-05	95-12-28	01-08-30	주택공사
용인신갈	411	1,710	3,533	10,955	98-10-07	99-11-04	05-12-30	주택공사
용인구갈	217	n.a.	2,329	9,316	88-12-31	89-09-02	92-01-14	토지공사
용인수지	949	n.a.	9,463	37,852	89-10-14	90-12-28	94-12-20	토지공사
용인구갈2	648	n.a.	3,399	12,576	94-03-10	95-11-13	01-02-10	토지공사
용인수지2	965	n.a.	6,581	24,349	93-11-08	94-12-09	02-12-31	토지공사
용인동천	213	n.a.	1,874	5,808	95-08-29	98-12-31	03-12-30	토지공사
용인신봉	452	n.a.	2,873	8,905	95-08-29	98-08-24	04-04-30	토지공사
합 계	5,377		40,695	146,529				

자료: 경기도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지원단(2006. 2. 1),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현재 사업이 완료된 12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총 5,377천㎡로서 여기에 40,695세대 14만 6,529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또 향후 2008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인 6개 택지개발지구 12,027천㎡에는 58,267세대 18만 1,046명 인구가 수용될 전망이다.

용인시 택지개발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사업이 가속화, 대규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2-1998년까지 7년간 준공된 구갈, 수지, 김량, 역북지구 등 4곳의 총 면적과 세대수, 수용인구는 각각 1,285천㎡, 13,483세대, 53,594명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2000-2005년까지 6년간 준공된 8곳의 총규모는 4,092천㎡, 27,212세대, 92,935명으로 확대되었다. 또 <표 3-2>에서 보듯이 향후 2006-2008년까지 3년간 준공될 예정인 동백, 죽전, 흥덕 등 6곳의 총규모는 이전 2000-2005년까지 개발된 사업과 비교하여 그 기간에서는 절반에 불과하나 총면적에서는 약 3배, 세대수와 수용인구에서는 약 2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3-2> 용인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지구명	면적 (천㎡)	사업비 (억원)	세대수 (호)	수용인구 (인)	지구지정	개발계획	준공 예정일	시행자
용인동백	3,305	11,047	16,672	51,681	97-02-27	97-12-03	2006.12	토지공사
용인죽전	3,592	15,000	18,479	57,290	98-10-07	99-12-01	2006.12	토지공사
용인보라	819	3,436	4,516	14,000	99-12-15	01-12-29	2006.12	주택공사
용인구성	994	5,857	5,259	16,304	99-12-15	01-12-29	2008.06	주택공사
용인서천	1,171	6,924	4,161	13,315	01-09-25	04-02-06	2007.12	주택공사
용인홍덕	2,146	13,052	9,180	28,456	01-12-26	04-02-06	2008.12	토지공사
합 계	12,027	55,316	58,267	181,046				

자료: 경기도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지원단(2006. 2. 1),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근거로 진행되는 사업이다.⁵⁾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은 대규모 주거지를 탄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증가, 도시 인프라 확대, 신흥 상권 발생 등 도시화 현상을 수반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지역사회를 형성시킨다.

용인시의 경우에도 가속화되어 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업지구 및 인근으로 인구유입과 집중이 심화되어왔으며, 더욱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준공될 용인시 택지개발사업이 수용인구 3만에 가까운 흥덕지구와 5만을 넘어서는 동백, 죽전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특히 충분한 도시 인프라의 공급, 생활안전의 확보 등의 문제가 배태될 수밖에 없다.

2. 치안 현황

용인시는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스키장, 골프장 등 24개소의 관광 위락시설 밀집지역(평일 35,000여명, 공휴일 10만 여명이 이용), 서울과 인접한 도·농 복합지역으로서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용인시의 인구는 1996년 272,177명에서 2000년에는 395,028명으로 증가하고, 12개 택지지구가 준공된 시점인 2005년에는 70만을 넘어섰다. 이처럼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용인시 인구는 무려 30만 명이 늘어남으로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2%를 상회하고 있다<표 3-3>.

인구성장률 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비교 결과에서도 용인시의 인구성장은 뚜렷한 확장세를 보여준다. 200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도 위의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같은 기간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증

5)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 2007.4.20 법률 제8384호)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 11. 1일 0시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 중 2000년 이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군구는 경기도 용인시로 2000-2005년까지 5년간 30만 4천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안산시(11만9천명), 충남 천안시(10만4천명) 등의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2006년 10월 말 현재 인구는 2005년 말 보다 다시 6만여 명 증가한 762,90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3>.

6) 통계청(2006. 5. 26), 『2005 Census 전수집계 결과 (인구부문)』.

<표 3-3> 용인시 인구 추이

단위: 명

년 도	인 구
1996	272,177
1997	302,564
1998	320,166
1999	359,406
2000	395,028
2001	455,118
2002	529,300
2003	583,516
2004	649,577
2005	702,007
2006	762,904

주 : 2006년은 2006.10.31일 기준
자료 : <http://www.estat.go.kr>(용인시 통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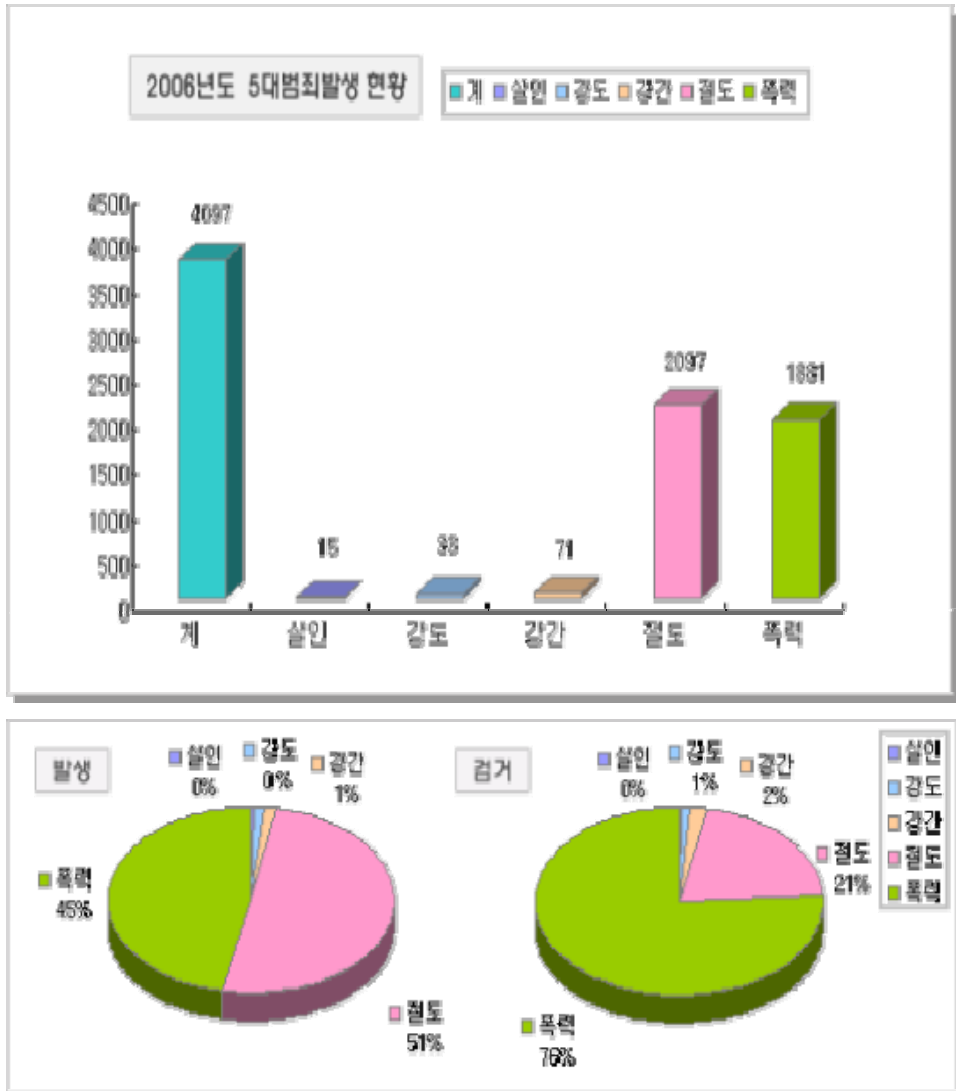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에 수반하여 용인시의 강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05년의 경우 총 4,244건으로<그림 3-1>, 2004년 범죄 발생 건수 2,125건에 비교할 때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의 5대 범죄 발생 증가율 25%(2004년 89,613건, 2005년 112,421건) 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용인시 관내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5년에 발생한 5대 범죄(4,244건) 중 절도가 47%(2,144건), 폭력이 51%(1,981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2004년도 5대 범죄 발생 건수(2,125건) 중 절도 22%(462건), 폭력 75%(1,582 건)에 비해 특히 재산범죄인 절도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006년도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총 4,097건으로 전년 2005년(총 4,244건)에 비해 다소 낮아진 반면, 절도와 폭력을 중심으로 한 5대 범죄 발생 구성비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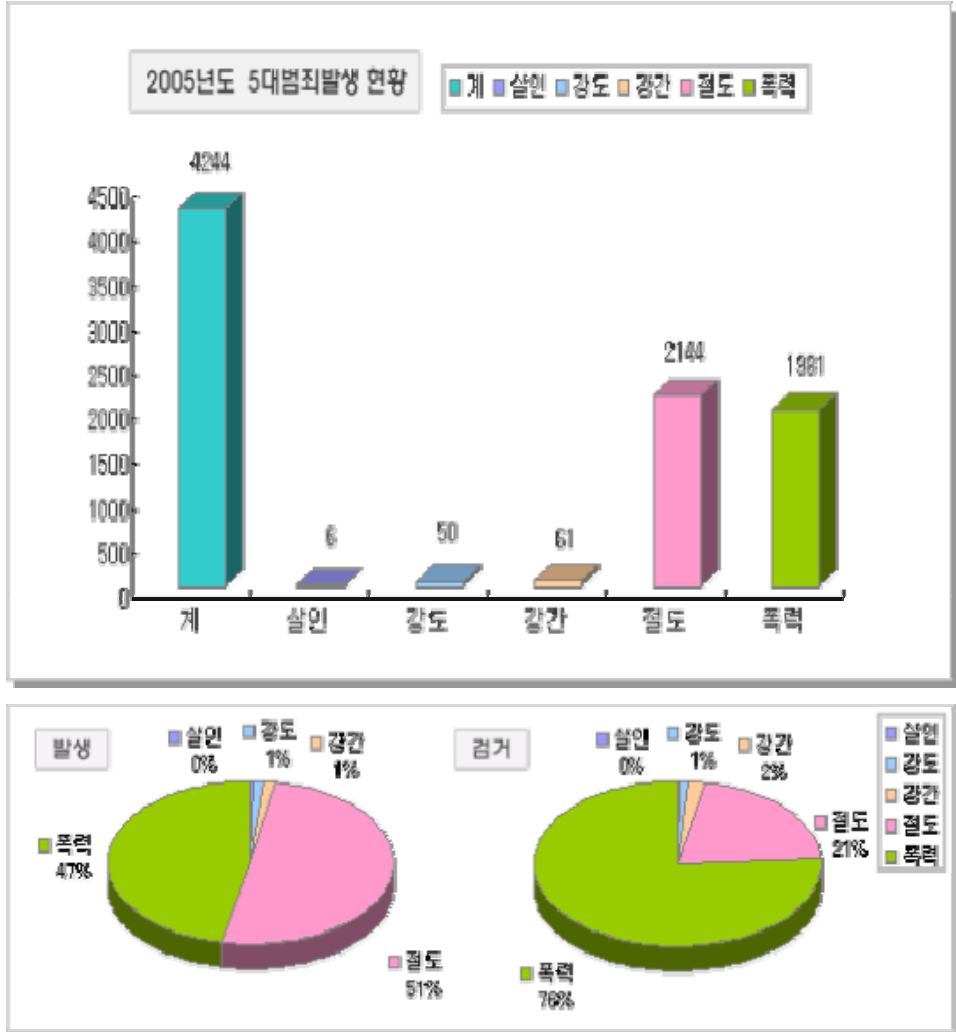
7) <http://yi.ggpolicer.go.kr>(용인경찰서 홈페이지)

<그림 3-1> 용인시 범죄발생 현황

▣ 2006년도 5대범죄 발생현황



▣ 2005년도 5대범죄 발생현황



자료: <http://yi.ggpolic.go.kr>(용인경찰서 홈페이지)

반면 이러한 인구 76만명, 면적 592km²(서울특별시 면적의 98%), 1시 3구 1읍 6면 22동의 치안을 담당하는 용인시 치안역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편이다. 경찰서 조직을 기준으로 한 치안역량을 보면, 2006년 12월 현재 기준 용인경찰서는 1실 6과 5지구대 5특수파출소 1방범순찰대(299중대)로 되어 있고 경력은 총 602명(정원 652명, 결원 50명)이다. 이 중 경찰관이 470명(정원 492명, 결원 22명), 전·의경 132명(정원 160명, 결원 28명)으로 되어 있다.⁸⁾ 따라서 용인시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2006년 10월 말 현재 1,623명으로 경기청 평균 850명의 2배에 이르고, 전국평균 526명에 3배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용인경찰서는 2007년 12월 현재 1실 6과 3지구대 11파출소 1방순대(299중대)로 도농지역 사정 등을 감안한 파출소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경력은 658명(정원 697명, 결원 39명)으로 2006년에 비해 50여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관 542명(정원 566명, 결원 24명), 전·의경 116명(정원 131명, 결원 15명)으로 경찰관 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의경은 다소 감소하였다. 이로서 용인시 경찰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1,552명으로 전년 1,623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경기청 평균 855명, 전국평균 526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치안상황 속에서 특히 2008년까지 동백, 죽전, 구성, 흥덕 등 6개 택지지구가 준공되어 58,267세대 18만1,046명 인구가 수용될 경우 현재의 용인시 치안능력으로는 그 범죄대응의 한계에 부딪쳐 용인시 택지지구 상당지역이 치안사각지대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용인지역을 관할하는 현재의 1개 경찰서로는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며⁹⁾ 치안서비스의 공백 해소를 위해 용인시 치안수요에 맞는 효율적 경찰인력배치와 제2의 경찰서 신설이 강력히 요구되

8) <http://yi.ggpolic.go.kr>

9) 특히 용인 서부권은 수지구, 죽전지구 개발 등을 통해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인 것에 비해 시민들의 안녕을 책임지는 경찰인력은 극히 부족하여 민생치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지구의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무려 4,7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수지구대에는 일선 지구대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반과 형사반까지 파견된 실정이다. 『용인신문』, 2006. 1. 9.

어 왔다.¹⁰⁾

이러한 용인시 치안서비스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용인시에서는 용인 서부권에 새로운 경찰서가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2005년 12월 30일 경찰서 신설관련 국회의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2008년 경 용인 서부서의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었다.

이러한 최근까지의 논의과정 속에서 용인 경찰서의 신설은 2010년으로 확정되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기흥구 보정동 죽전택지개발지구에 용인서부경찰서(가칭)를 신설하기로 하고 2008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0년 7월까지 개설하기로 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수지구 전체와 기흥구 일부를 관할하게 된다.¹¹⁾ 경찰청은 이처럼 2010년 용인 서부지역의 신설 확정을 밝히고 있는 바, 관할인구와 범죄발생건수, 112신고건수 등 주요 치안지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치안수요에 적절한 경찰서 신설과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2006년 11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지역별 치안수요의 심한 편차로 경찰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찰청에 편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절의한 바 있다. 『내일신문』, 2006. 11. 2.

11) 『중앙일보』, 2007. 11. 7.

IV. 효율적 치안서비스 확보 방안

1. 치안서비스의 효율화 매트릭스

효율적 치안서비스 확보 방안은 앞서 제시한 범죄예방 제도화 모델의 틀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치안서비스의 효율성, 즉 치안서비스의 기본 방향으로서 효율성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치안서비스의 효율성은 생활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범죄발생위험의 최소화과 치안비용의 최소화라는 두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범죄발생위험의 최소화는 효과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그 효과의 극대화(범죄발생위험 최소화)는 지역 생활 안전을 완전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또 치안비용의 최소화는 비용절약을 달성하는 것으로, 그 절약의 극대화(비용의 최소화)는 생활안전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 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정 지역 내 생활안전 치안서비스에서 범죄발생 위험 최소화는 비용최소화와 함께 동시적으로 조화롭게 달성되어야 할 것이며, 치안서비스의 높은 효율성은 범죄발생위험의 최소화라는 효과성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치안비용이 투입될 때 확보된다. 이와 같은 범죄발생위험의 최소화과 비용 최소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운용·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그림 4-1>과 같은 매트릭스(matrix)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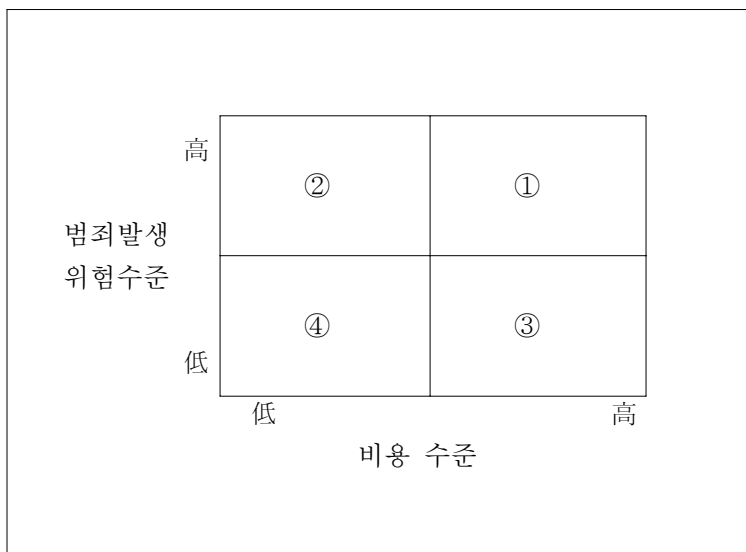
생활안전 치안서비스의 효율화에서 종축은 범죄발생위험 최소화의 달성 정도이다. 종축의 위쪽으로 위치할수록 범죄발생위험도가 높아지고, 아래쪽으로 위치할수록 범죄발생위험도가 낮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횡축은 치안비용 최소화의 달성 정도이다.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당해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운용을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왼쪽에 위치할수록 적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림 4-1>에서 볼 때 일정 지역 내 생활안전 치안서비스의 효율성은 범죄발생위험의 최소화과 치안비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 축의 결합에 의해 평가된다. 나아가 현 위치에서 향후 어떠한 제도 운용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가 모색될 수 있다.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효율화 매트릭스에서 어떤 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범죄발생위험 수준과 치안비용 수준이 낮은 ④ 분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범죄발생위험은 낮으나 비용 수준은 높은 ③ 분면의 경우에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design),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범죄발생위험 수준은 높으나 비용 수준은 낮은 ② 분면의 경우에는 범죄발생위험을 낮추는 제도적 대응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① 분면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범죄발생위험이 큰 경우로서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되는 위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 생활안전 치안서비스의 효율화 매트릭스



본 연구는 <그림 2-1>의 범죄예방 제도화 모델을 통해 범죄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주체로 지역경찰, 지자체·공공기관, 민간 시큐리티 업체·시민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중 지역경찰은 범죄예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바, 경찰서 신설과 장비확충, 인력증원 등 많은 경찰예산이 직접 투입될 경우 범죄발생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며 이 경우는 위 <그림 4-1>의 ③ 분면에 해당한다. 자발적인 민간 참여에 의한 범죄예방은 앞의 경우에 비해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반면, 범죄발생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경찰예산을 증액시킬 때 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 경우는 ② 분면에 해당한다. 또 지자체가 지역경찰과 비용을 분담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범죄발생위험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는 ② 분면과 ③ 분면 사이의 어느 점에 위치할 것이다.

용인시의 사례와 같이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서 직접적인 경찰예산증대에만 의존하는 치안 확보는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생활안전 치안서비스를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확보의 구체적 방안으로 공공부문에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PTED), 민간부문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방범대조직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이들 방안은 그 적정 운영 여하에 따라 범죄발생수준을 감소시켜 ② 분면에서 ④ 분면으로 이동함으로써 저비용에 의한 범죄발생위험 감소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2. 치안서비스 확보 방안

1)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PTED)

(1) 의의

건축물, 지역, 또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은 1972년 미국 정부가 발주하고 뉴먼(Newman)이 수행한 학제적 연구용역인 “도시 거주지역 방범설계 프로젝트”를 계기로 하여 발전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범죄학, 건축학 및 지역/도시개발정책학의 실무적 공동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아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기법의 발달 및 확산과 함께 외국에서는 필요한 방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물주와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세입자나 소비자들이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범죄피해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을 묻는 소송(Premises Liability Cases)’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급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건물이 설계되고 유지되는 방식과 범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CPTED 이론들과 ‘범죄가 대상건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의사결정과정의 산물’이라는 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방법계획(CPTED)의 기본 개념은 범죄행위를 위험-효과 비율(Risk-Reward Ratio)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 환경을 조절하여 범죄 심리의 유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CPTED의 근본적인 목적이다(최재필, 2006: 1).

(2) 주요 이론

합리적인 가로등 및 CCTV 설치계획의 수립을 목표로 공간의 물리적 구조와 범죄 발생률간의 상관관계를 객관적,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공간분석기법으로서 공간구문론(Space Syntax) 모델과 시각적 접근과 노출(Visual Access & Exposure, VAE) 모델을 이용하여 CPTED 실시 시범지역의 가로구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공간구문론과 VAE 모델은 해당 공간의 속성을 정량적 수치로 산출하여 표현함으로써, 산출된 지표 값들과 해당 공간의 특정 범죄 발생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대상 지역의 공간구조와 범죄 발생 데이터와의 상호 연관성을 규명하고, 범죄발생 모델을 설정함으로써 가로등 및 CCTV 배치의 최적화 계획을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최재필, 2006: 37-46).

① 공간구문론(Space Syntax Theory)의 개요

공간구문론은 공간구조를 공간의 연결 관계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공간배치의 위상학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런던 바틀렛 대학(Bartlett School of Graduate Studies,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힐리어(B. Hillier)와 헨슨(J. Hanson)에 의해 주창되었다. 공간구문론은 공간구조에 내재된 사회적 특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공간과 공간 간의 관계, 동선에 의한 연결 관계를 통해 건축 및 도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교류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공간에 대한 이해는 개별 공간이 가진 개체적 특성보다는 전체 공간구조 속에서 공간 상호 간의 위상학적인 관계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예를 들어 다른 공간들과 연결의 정도가 높은 공간은 그렇지 않은 공간에 비해 위상학적으로 중심에 있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각 공간들 간의 위상적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공간구문론에서는 공간구조를 그래프 이론(graph theory)에 의해 시각화하는데, 즉 공간과 그 사이의 연결 관계를 노드(Node, Vertex)와 에지(Edge, Link)로서 표현한다. 즉 공간구문론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공간구조를 단위 공간

(노드)과 단위 공간들 간의 연결 관계(에지, 링크)로 치환하여 단순하게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단위공간의 재현 방식에는 볼록공간도(convex map)와 축선도(axial map)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볼록공간 방식은 특정한 건축 공간 내에서 하나의 단위 공간을 닫힌 다각형(closed polygon)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폐쇄된 실 단위의 공간들을 가지는 단일 건물 내의 공간 등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반면 축선 방식은 시각적으로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루트를 직선으로 표현하여 단위 공간을 재현하는 방법으로서, 복도나 가로 등과 같은 선형의 경로 공간이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도시 공간 등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와 같은 단위 공간의 재현 방식을 바탕으로 각각의 단위 공간을 노드(node)로 설정하고 각 단위 공간 간의 연결 관계를 링크(link)로 설정함으로써, 분석 대상이 되는 하나의 건축 공간 조직을 단위 공간과 그 연결 관계만으로 치환하여 시각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단순화하여 표현한 그래프 구조로부터 전체 공간 가운데 해당 단위 공간이 가지는 다른 단위 공간들과 연결된 정도와, 연결 관계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는 위상 정도를 수치로 정량화된 속성(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즉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수학적 처리를 통하여 공간의 위상적인 체계를 시각적으로 그래픽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연결도(Connectivity), 통제도(Control Value), 국부통합도(Local Integration), 통합도(Integration) 등의 공간분석지표들은 각각 특정 공간조직 내에서 한 단위 공간이 갖는 위상학적인 중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라 할 수 있다. 상술하면 연결도, 통제도, 국부통합도는 국부적인 범위 내에서의 단위 공간의 위상학적인 중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통합도는 대상 지역의 전체 공간 조직 내에서 한 단위 공간이 가지는 위상학적인 중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연결도, 통제도, 국부통합도 간의 세부적인 차이는 각 지표의 정의 및 산출 방식에서 추론 가능하다. 즉 연결도는 한 단위 공간에 연결된 인접 단위 공간들의 개수로서 단순히 표시되는 지표이므로 가장 국소적인 범위에서 한 단위 공간의 연결 정도를 알려준다. 통제도는 연결도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나, 산출 과정에서

인접 단위 공간들이 또 다시 그 주변의 인접 단위 공간들에 미치는 연결도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산출되므로, 국부적인 범위에서의 공간들 간의 영향 관계를 더욱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통합도는 전체 공간 조직 내에서 한 단위 공간이 다른 모든 단위 공간들에 도달하기 위해 거치는 공간의 깊이를 모두 고려하여 산출되므로, 해당 공간이 전체 공간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적 중심 정도를 알려준다. 국부통합도는 통합도와 동일한 계산 방식을 거치지만, 공간의 분석 범위가 한 단위 공간의 주변으로 3 단계까지 연결된 단위 공간들 이내로 한정되므로, 3 단계 내까지의 공간 조직 안에서의 위상적 중심 정도만을 알려주는 국부적 지표이다.

이와 같은 공간분석지표들과 범죄 발생률 간의 상관관계는 고정된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 대상 지역의 공간적 범위 또는 규모, 대상 지역의 성격, 사회문화적 요인, 특정 범죄의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결도의 경우 높은 연결도를 가지는 공간은 잠재적인 범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탈출의 가능성'과 '갑작스러운 방해자의 출현'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통제도의 경우 통제도가 높은 공간은 주변 공간에 의한 통제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범죄 유발 역제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통제도가 높다는 것은 동시에 해당 공간이 주변 공간에 대해 동일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범죄자의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서 통합도의 경우, 선행 연구들에 의해 통합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그에 비례하여 사람들의 통행량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증명되었다. 만일 특정 지역에서 통합도가 높은 공간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면, 이는 이 공간에서 통행량이 많으므로 보통의 통행인으로 가장한 잠재적 범죄자가 범행 대상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지역에서 통합도가 낮은 공간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통합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통행량이 많으므로 통행인들이 자연적, 무의식적으로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통합도가 낮은 공간에서는 그에 따라 자연적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보행인이 감소하므로, 범죄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간구문론에 의한 분석지표와 범죄 발생률 간의 상관관계는 고정된 가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앞서 상술했던 범죄의 유형, 대상 지역의 특성, 그리고 분석 지역의 스케일, 즉 분석 범위를 전체 도시 또는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또는 소규모 지구,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가 등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 결과도 도출될 수 있다. 이는 공간구문론 모델이 순수한 공간 구조적 속성 이외에 모든 사회문화적 요인을 배제하고, 대상 공간의 속성을 단위 공간들 간의 연결 관계로부터만 추출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공간의 연결 관계를 통한 공간 구조의 위상학적 분석이 범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데에 특정한 해석상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범죄와의 관계를 단순한 가설로 규정하기에는 공간의 형태, 성격 등의 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의 해석은 고정된 가설에 근거하기 보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다양한 구조적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하여 그 원인을 추정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시각적 접근과 노출(Visual Access & Exposure) 이론의 개요

VAE(시각적 접근과 노출) 모델은 아치(J. C. Archea)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서, 공간 내의 임의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보거나, 다른 지점으로부터 보일 수 있는 정도를 정량화하여 해당 공간의 분석 지표로 삼는 기법이다. VAE 모델에서는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상호 작용을 '볼 수 있음(Seeing)'과 '보일 수 있음(Being seen)'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즉 VAE는 건축 환경 내에서 한 지점이 주변 공간을 잘 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시각적 접근값과, 한 지점이 주변 공간에 대하여 잘 보일 수 있는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시각적 노출값을 산출해내는 분석 모델이다.

범죄 행위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Visual Access)과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Visual Exposure)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VAE 모델의 시각적 접근값(VA)은 특정한 위치에서 한 사람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따라서 잠재적 범죄자의 입

장에서 시각적 접근이 높다는 것은 주변 감시기회의 증가를 의미한다. 시각적 노출값(VE)은 특정한 위치에서 한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정도, 즉 잠재적 범죄자의 입장에서 시각적 노출이 높다는 것은 위험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VAE 모델을 통해 적절한 시각적 접근과 노출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범죄 심리 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설계가 가능하다.

(3) 적용

CPTED 기법은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건물설계나 도시계획 수립시 설계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건물구조·길의 형태·조명·조경 등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여 주거침입 절도와 같은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¹²⁾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판교신도시, 아산신도시 등의 건

12) 외국의 CPTED 적용 사례를 보면

① 미국:

-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주변을 구분하여 CPTED를 시행하고, 출입통제장치·경보장치·신원확인 장치 등과 같은 방법기계설치를 통한 범죄예방을 중시.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CPTED 가이드라인 제시.
- 애리조나주 TEMP市的 경우 1997년 주조례에 CPTED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일반건물 및 술집·당구장·성인용품점 등 범죄유발장소에 적용. 내부공간·조명·조경·출입구·표지판·감시창·주차장의 구조 등에 대한 기준과 규격 규정하고, CPTED 경찰관은 규정에 맞지 않는 건축에 대해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스티커를 발부.

② 영국:

- 1980년부터 영국범죄예방센터(The British Crime Prevention Center)에서 CPTED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1998년 ‘범죄와무질서법’을 제정하여 CPTED 개념을 제도화.
- ※ 방법환경설계제도(SBD, Secured By Design award scheme)
CPTED 전문경찰관들이 시공·건축·완공단계에 현장조사, 환경설계와 보안장비를 점검한 후, 기준에 맞으면 SBD 인증서 발급.
- ※ 안전주차시설제도(SCP, Secured Car Parks award scheme)
CPTED 전문경찰관들이 상업주차장, 철도역 주차장, 대형주거지역 주차장에 대해 안전진단 실시.
- 매년 부총리실에서 “SAFER PLACES - 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이라는 건축 지침을 발간하며 동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별 건축지침 마련, 운용.

③ 캐나다

- TORONTO시의 경우, 1992년 도시개발 및 계획가들을 위한 매뉴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실무지침서’ 발간.
- TORONTO시 PEEL 지역경찰은 주택건축 안내지침, 학교설립계획, 상가 및 공단 개발 등에 CPTED개념을 적용.

④ 호주

- New South Wales 주의회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대비하여 CPTED를 원용한 ‘안전설계(Design Safety)’ 개념을 모든 건물과 공공시설 건축설계에 적용.

설에 CPTED 기법을 적용한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충남 연기. 공주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범죄 없는 도시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CPTED를 도시 설계 전 과정에 반영하기로 밝힌 바 있으며(서울신문, 2006. 2. 18), 최근 아산시에서도 관계 부서 공무원과 주택공사, 삼성전자,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CPTED 기법을 아산시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대전일보, 2006. 6. 28).

경찰청에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판교신도시에 CPTED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경찰청 보도자료, 2005. 7. 28).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판교신도시에 적용할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영국·미국 등 외국의 적용 사례와 경기 일산·수원 영통지구 등 기존 신도시나 대규모 주택단지의 범죄 특징 및 취약 원인을 분석 중에 있다. 이와 아울러 기존 도시에도 CPTED를 적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6개월간 경기 부천시 고강동·심곡동·소사본동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CPTED를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시범실시가 끝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기존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CPTED 기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용인시에서도 흥덕지구 등 사전에 범죄예방 환경 구축이 용이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지구에 CPTED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용인시는 현재 건설 중인 택지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에 경찰청,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과 협의하여 주거환경 설계 초기단계부터 범죄예방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되, 그 고려사항으로 판교신도시의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안)을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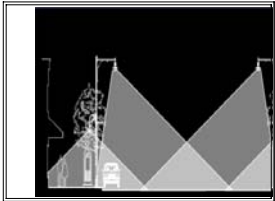
-
- 건축설계를 허가함에 있어 ‘범죄위험성 평가’를 의무화.
 - ⑤ 일본
 - 경찰청에서 안전한 도시를 위해 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도시방범기준의 책정’ 실시 중.
 - 강력범죄 대처를 위해 도쿄·오사카의 주차장·공원·전철역 등 공공장소와 슈퍼마켓·24시 편의점에 CCTV설치(경찰청 보도자료, 2005. 7. 28).

건물구조



- 계단 등 건물의 공용부분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치
- 범죄인의 침입이 어렵도록 베란다 높이·창문 위치 등 결정

가로등·방범등



-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로등 설치
- 지역 특성에 따른 가로등간 거리·조도 조정
- 골목길 등 우범예상 지역 중심 방범등 설치 등

조경



-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거주지 주변 조경 높이 등 제한
- 대로·놀이터 등 주변환경에 맞는 조경

□ 놀이터 등 휴식공간



- 주거지 중심부에 놀이터 설치
-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담장 설치
- 주변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구성

□ 도로구조



-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로 위치·폭 선정
- 지역 특성에 따라 cul de sac(막다른 골목)설치 등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로 구조 선정

□ 방범시설물



- 상가 등 범죄예상지를 중심으로 CCTV 설치
- 출입카드·민간경비원 등을 통한 출입통제권고
- 주차장 등 취약지에 비상벨 설치

특히 용인 흥덕지구와 같은 곳은 모든 건축물에 초고속 통신망을 기반으로 정보라인을 통합 관리하는 도시정보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 내 우범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등·방범등·CCTV·경보장치의 설치와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바, 이러한 u-City 구축사업지역에 CPTED 기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방범조직 활성화

(1) 의의

범죄예방 제도화 모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시민·시큐리티업체 등은 범죄대응의 주요 행위자, 현실적 이해당사자이며 이들의 참여 협조는 범죄 예방의 제도화에 중요한 성패 요인이다. 이중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의 제도화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주민들의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관련예산과 인력이 집중하고, 관료적 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경찰조직만으로는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범죄문제는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은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치안대상의 특색에 따른 탄력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통해 준경찰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찰의 부족한 치안역량을 보완하고, Community Policing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주민과 친밀한 경찰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경찰 홍보효과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관 협력체제 하에 저비용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치안질서 유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2) 주요 이론

자율방범과 관련한 주요 이론으로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이론,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등을 들 수 있다(서진석, 2006: 11-20).

①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이론의 개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범죄와 범죄두려움, 지역사회의 무질서 등의 문제를 경찰과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해결하여 경찰활동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향후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지는 새로운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선 경찰관의 분권화, 지역주민과의 친절한 상호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경찰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최응렬, 2005: 11).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무질서 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되, 종래와는 다른 방법인 경찰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범죄에 관련된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경찰력만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기 힘들다는 점에어서이다. 1970년대의 연구평가들은 범죄와 싸우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주로 비효과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범죄예방에서의 주민참여와 자기보호적 행위의 채택은 경찰활동에도 이득이 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사회무질서 통제, 안전감에 대한 인식강화 등 질서유지기능이 범죄통제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사회 무질서 통제와 안전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강한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범죄예방에서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더불어, 실제 범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상호작용의 수준과 질을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지역조직들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중심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고객만족의 운영 철학이다. 지역사회의 모든 경찰활동, 즉 경찰운영을 고객인 지역주민의 만족을 최대의 가치로 인식하고 운영해 간다는 것이다. 둘째, 경찰 역할의 변화이다. 경찰역할은 주로 상급기관이나 상부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르거나 법을 피동적으로 집행하는 집행자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을 위한 조언자(advisor), 조정자(coordinator), 촉진자(facilitator) 그리고 문제해결사(trouble shoot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지역 주민과의 파트너쉽이다. 즉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 주민과 경찰이 공동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 문제의 해결이다. 이는 경찰의 실적 평가에서도 단지 범인 검거 수나 검거율 등의 이른바 건수주의 혹은 양적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해결된 문제의 내용이라고 하는 질적 기준을 중시한다(정진환, 2006: 294-295).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경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 인식과 책임감 강화, 범죄 및 범죄두려움 감소, 범죄예방,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관계개선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경찰활동 형태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 순찰체제의 개편, 경찰의 책임성 강화, 명령체계의 분권화 등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최용렬, 2005: 14-18).

②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이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등장과 더불어 치안서비스에 대한 공동생산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웃공동감시(Neighborhood Watch)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경찰에 범죄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형태는 널리 알려져 있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란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시민들이 치안서비스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생산은 좁게는 정부 서비스 전달 담당자와의 상호작용이 있는 시민들의 서비스 생산활동에의 참여를 의미하여, 넓게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있던 없던 시민들의 서비스 생산활동에의 모든 참여를 의미한다(김인, 1997).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범죄문제의 심

화, 경찰력의 한계, 시민의 자경의식 증대, 거대 사적재산가의 증대,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등을 들 수 있다(최선우, 1999).

시민들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유형은 개인적인 활동과 집단적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치안서비스의 주된 공급자인 경찰과의 협력관계에 따라 소극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을 개인적 생산과 집단적 생산이라는 한 차원과 적극적 생산과 소극적인 생산이라는 또 다른 한 차원을 교차 분류하여 네 가지 유형을 만들 수 있다. 즉, 개인적·소극적 공동생산, 개인적·적극적 공동생산, 집단적·소극적 공동생산, 집단적·적극적 공동생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개별적·소극적 공동생산이란 경찰과 관련 없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방범장비의 휴대, 이중자물쇠 등 잠금장치의 설치, 각종 침단경보장치의 설치, 자녀에 대한 방범교육의 실시, 귀가 중인 자녀의 안전을 위한 마중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방범활동이다.

둘째, 개인적·적극적 공동생산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율방범활동이지만 범죄피해나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와 아울러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활동과 같이 주로 범죄정보제공과 관련된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이다. 물론 이러한 신고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감시활동을 펴서 수상한 자를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공동생산 활동은 시민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오랜 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며, 경찰의 범죄통제능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셋째, 집단적·소극적 공동생산은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경찰과 상호작용 없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말한다. 자체적인 순찰활동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방범대책을 협의하여 대책을 세운다든지, 공동으로 경비원을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만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의 협의는 범죄가 많이 생기는 지역이면 어디서든지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주민들 간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경우에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집단적·적극적 공동생산은 집단적 차원에서 경찰과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활동은 경찰의 협조하에 지역주민이 집단적으로 직접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청소년을 선도하는 활동은 물론 다양한 유형이 있다.

집단적·적극적 공동생산인 자율방범대 활동은 자신들에게만 편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범죄의 억제와 감소, 시민들의 안전감 등의 편익이 생겨나는 공공서비스 비배제성이 적용 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이러한 편익을 누리려고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언제나 적게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소극적 활동에 비해서도 훨씬 적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치안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즉 공동생산의 문제 중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러한 집단적·적극적공동생산인 자율방범활동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자율방범활동은 시민들이 치안서비스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참여도 포함하며,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유형의 활동을 넓은 의미에서 자율방범활동이라 볼 수 있고, 집단적·적극적인 자율방범활동인 주민들의 자율방범대 활동만을 좁은 의미에서의 자율방범활동이라 볼 수 있다. 일상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이라 부르는 것은 후자를 지칭하는 것이다(김인, 1997: 82).

(3) 적용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서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이 범죄예방을 위해 마을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상호협력 관계를 갖고 방법활동을 하는 봉사조직이다. 자율방범대는 자체적으로 3~5명이 조를 편성하거나 경

찰과 합동으로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 현황을 보면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3,836개 조직에 9만 8천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8,067건의 범죄신고와 3,318명의 형사범을 경찰관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치안 활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자율방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이 안정적인 근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나가고 있는 바, 민방위 해당자의 기본교육을 면제하고 치안봉사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고보상대책으로 전국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모범대원 및 형사범 합동검거 유공자 5,225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경찰청, 2006).

용인지역의 경우 관내 용인경찰서에서는 서비스현장에 ‘생활안전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우범취약 지역에 1일 1회 이상 도보·112순찰 등 가시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¹³⁾,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용인시 관내의 최근의 주요 활성화 추진 상황을 보면 아래 <표 4-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 지구대·파출소 차원의 자율방범대 결성에서부터 자율방범대 간담회 개최¹⁴⁾, 연합자율방범대 구성¹⁵⁾ 등 자율방범대

13) 2006년 12월 1일 현재 용인경찰서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조직은 생활안전과 및 그 아래 4개 지구대(구갈, 중앙, 수지, 양지), 7개 파출소(상현, 고매, 구성, 남사, 모현, 이동, 포곡) 편제로 되어 있었으나, 2007년 12월 1일 현재는 지구대가 3개(구갈, 중앙, 수지)로 축소되고, 파출소는 11개(상현, 고매, 구성, 남사, 모현, 이동, 포곡, 양지, 원삼, 백암, 동백)로 증가하였다.

14) 용인경찰서는 2005년 10월 6일, 경찰서 사회의실에서 각지역 자율방범대 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치안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는 주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이상적인 협력방법, 협력치안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에 지난 2005년 7월부터 각 지구대 및 파출소별로 발대식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각 지역 대장 15명을 초청하여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방법활동 공로대원 3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 및 2005년 용인경찰 방법활동 추진사항 소개 및 지역안전을 위한 경찰활동 방향, 민.경 협력치안 강화방안 등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된바 있다. <http://yi.ggpolic.go.kr>

15) 용인경찰서에서는 2006년 3월 25일, 경찰서 강당에서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경찰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취임식과 5층에 마련된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주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협력방법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에, 각 지구대 및 파출소별로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위상을 확립하는 한편, 연합대가 구성됨으로써 자율방범대가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던바, 본 행사는 경찰서장의 연합대장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방법활동 공로대원 2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 및 경찰서 5층

조직이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표 4-1> 용인시 자율방범대 조직활성화 현황

- 2005. 7. 23: 중앙지구대 자율방범대 발대식 개최
- 2005. 7. 29: 구갈지구대 자율방범대 발대식 개최
- 2005. 7. 30: 양지지구대 자율방범대 발대식 개최
- 2005. 8. 13: 모현파출소 자율방범대 발대식 개최
- 2005. 10. 6: 협력치안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간담회 개최,
지역 내 자율방범대 대장 등 30여명이 참석.
- 2006. 3. 25: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취임식 및 사무실 개소,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200여명이 참석.

자료: <http://yi.ggpolic.go.kr>(용인경찰서 홈페이지)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용인시 자율방범대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홍보와 교육의 강화, 자율방범활동 참여자에 대한 각종 유인체계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유인체계의 개발 중에서 특히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는 주민들에게 더욱 활발하게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그 소요비용에 비해 범죄예방의 성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은 삶

에 새로이 마련된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http://yi.ggpolic.go.kr>

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하며 시당국은 자율방범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등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제시될 수 있다.

즉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대해 용인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초 수준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원봉사자의 범죄예방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자율방범센터 운용 또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하는 기초적인 지원들이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전원형 단독주택단지, 단독주거와 집합주거의 장점을 살린 블록형 단독주택단지가 시도되고 있고 용도복합화 경향에 따른 주상복합건물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아파트 단지 위주의 범죄예방 시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택지지구 내 다양성을 고려한 자율방범대 운용과 실효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V. 결 론

용인시는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용인시는 2006년 10월 말 현재 인구 762,904명으로 2000-2005년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2%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도 동기간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에 수반하여 용인시의 강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05년의 경우 총 4,244건으로, 전년에 비교할 때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의 5대 범죄 발생 증가율 25% 보다도 훨씬 높다.

반면 용인시 치안역량은 매우 미흡한 편으로 용인시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2006년 10월 말 현재 1,623명으로 경기청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전국평균의 3배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8년까지 동백, 죽진, 흥덕지구 등 6개 택지지구가 준공되어 58,267세대 18만1,046명 인구가 수용될 경우 현재의 치안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쳐 용인시 택지지구 상당지역이 치안사각지대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용인시의 사례와 같이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서 직접적인 경찰예산증대에만 의존하는 치안 확보는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경찰 외에 지자체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체도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생활안전 치안서비스를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자체 등 공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PTED), 민간부문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방범대조직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우선 용인시는 사전에 범죄예방 환경 구축이 용이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지구에 CPTED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용인시는 현재 건설 중인 택지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에 경찰청,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

관 실무자들과 협의하여 주거환경 설계 초기단계부터 범죄예방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며, 특히 흥덕지구와 같은 곳은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어 가로등·방범등·CCTV·경보장치의 설치와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바, 이러한 u-City 구축사업지역에 CPTED 기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조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유인체계의 개발 등이 필요하며 특히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는 주민들에게 더욱 활발하게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하며 시당국은 자율방범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전원형 단독주택단지, 단독주거와 집합주거의 장점을 살린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용도복합화 경향에 따른 주상복합건물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아파트 단지 위주의 범죄예방 시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택지지구 내 다양성을 고려한 자율방범대 운용과 실효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경찰 외에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치안서비스의 확보는 용인시의 급증하는 생활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향후 자치경찰제 하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활성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지역이 특별법에 의거 2006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외 정부에서 마련한 ‘자치경찰법안’이 2005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는 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1년간 시범운영 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에 대비하여 용인시는 지금부터 지역경찰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넓혀 갈 때 향후 용인시 단위의 자치경찰대 창설과 자치경찰 아래 전개될 치안서비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지원단(2006. 2. 1),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 경찰청(2006), 『경찰백서』.
- 김석준 외(2002), 『거버넌스의 정치학』, 법문사.
- 김충남(2005), 『경찰학개론』, 박영사.
- 서진석(2006),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 정 웅(2007), 『용인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효율적 치안서비스 확보방안』, 『용인학연구』, 용인발전연구센터.
- 정진환(2006),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 최선우(2003), 『경찰과 커뮤니티』, 대왕사.
- 최응렬(2005), 『지역경찰제의 정착화를 위한 과제』, 치안정책연구소.
- 최재필(2005), 『환경설계를 통한 방법계획(CPTED) 시범적용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통계청(2006. 5. 26), 『2005 Census 전수집계 결과 (인구부문)』.
- 『내일신문』, 2006. 11. 2.
- 『용인신문』, 2006. 1. 9.
- North, D. C.(1990),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trom, E.(1986), “An Agenda for the Study of Institutions”, *Public Choice*, 48.
- Rhodes, R.A.(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http://www.estat.go.kr>(용인시 통계 홈페이지)

<http://www.ggpolicy.go.kr>(경기지방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yonginsi.net>(용인시청 홈페이지)

<http://yi.ggpolicy.go.kr>(용인경찰서 홈페이지)

책임연구보고서 2007-11

도시개발지역에서의 범죄양상과 효율적 대응방안

A Study on Crime Features and Efficient Countermeasure
in the Urban Development Area

2007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